



양계 안 테 나

홍보팀

건전한 육계계약사육문화 정착 국제 경쟁력 확보의 근본

지금부터 20년전 양계계열화사업이 이 땅에 상륙하면서 우리는 양계산업의 안정을 바라면서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등 선진 외국의 계열화 사업 정착사례가 우리 양계인들의 선망이 되었던 것이다. 육계는 이미 계열화사업의 비중이 높아져 80% 이상의 육계인들이 계열화에 참여하고 있어 일반사육업자들이 자유롭게 닭을 키워 판매를 하기가 무척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육계 계열화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계열화사업체와 계약사육농가들간에는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이 커지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현상일 수밖에 없다. 외국 선진국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서로간의 의사교환과 조정 등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육계산업 발전과 계열화 확대에 따라 회전수 감소, 계약사육 평가방식 변경 등 불만 사항이 늘어갔고, 특히, 최근에는 입주초기 폐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농장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일부 계열사들은 농장에서의 계근이 아닌 도계장 도착시 계근을 하는 곳도 있어 감량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질 수밖에 없다.

최근 2년간 변화된 계열사들의 계약서를 보면 농가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사육비는 변화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수익에 영향을 가져다주는 사료요구율 1.96에서 1.83으로 0.13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농가에서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이후 계속되어온 육계불황으로 계열화업체와 함께 어려움을 감내해 왔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이후 고가의 육계가격이 형성되면서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재기를 마련하였고, 농가들도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계약조건들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 농가들로부터 불공정한 계약서라는 강한 비판 속에 다시 계약조건을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

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시세변동가격에 따른 보너스 조항 등 일부 사육농가들의 입장에서서 조정된 내용도 있지만 시세가 높은 가운데에서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농가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인 듯 싶다.

그 동안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양가들은 표준계약서를 요구해왔고, 양계협회에서는 지난 1990년에 이어 2002년에 육계계열생산위탁표준계약서를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하였으나 각 회사마다의 경영방식에 따라 계약서가 다양하게 적용되면서 표준계약서의 활성화는 소원해지고 있다. 물론 표준계약서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사양가를 생각하는 계열사의 관심이 높아진다면 보다 좋은 계약문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열업체와 사육농가들은 한 배를 탄 운명에 놓여 있다. 수입닭고기의 증가 등 외압에 대비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건전한 계약문화 정착이 우선시되어야 하겠고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안전성 심각한 것으로 인식

소비자들은 과연 축산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각종 항생제 잔류문제 등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대한주부클럽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20세 이상의 남녀 1,960명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15일~24일, 10일간에 걸쳐 조사한 축산물 소비실태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닭고기 구매횟수는 월평균 2.5회로 돼지고기(3회)보다는 낮았으나 소고기(1.97회) 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고기 선호도는 돼지고기(74.5%), 소고기(62.7%)에 이어 닭고기(57.4%)순으로 나타나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영향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닭고기 소비확대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을 구입할 경우 선택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산 여부가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등급 등 품질이 22.8%, 가공일 및 유통기한이 17.7%, 가격이 11.5%, 지역 원산지 표시가 7.9%, 구입당시 판매자의 권유가 5.6%로 나타났는데, 국내산여부가 무엇보다도 가장 높게 나타나 수입이 밀려오는 가운데에서도 국내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이루어질 경우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확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입장소의 선택기준은 고기의 질이 44.4%로 가장 높았고 편리성이 27.8%, 거리가 23.5%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맛과 질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축산물 전반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가 72.2%로 나타났으며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28.0%로 나타났고, 축산물 안전수준 평가에 있어서도 기대이하라는 응답이 48.4%로 기대이상의 21.5%를 크게 앞섰다. 따라서 이는 최근에 불거져 나오고 있는 축산물내 항생물질과 안전성 등의 보도가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냉장육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전체의 79.6%로 신선도와 맛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장육 선호도에서는 미포장육이 61.0%. 포장육이 20.9%로 나타났으며 포장육 선호 이유로는 위생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추진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정작 HACCP 제도의 인식은 잘 모른다가 68.3%로 알고 있다의 31.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을 통해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소비자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에 대해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시행령개정안 시행 양계장 관련법 상호보완 뒤따라야

농림부는 창업 및 공장설립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양계장 및 관련시설 포함)이 창업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해 말 확정되어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양계장이나 중소기업공장 등을 설립할 경우 경지정리 등 기반정비 투자정도에 따라 m^2 당 10,300~21,900원의 농지조성비를 지불하던 것을 개정 후 면적에 관계없이 전액면제 되며, 시군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현행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1만 m^2 미만까지 위임되던 것이 개정후 3만 m^2 미만까지 확대, 처리기간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되고,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지형도, 피해방지계획서 등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자체 확인이 가능한 지적도, 임야도등본, 지형도의 제출이 제외되고,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변경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했던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하면 된다.

농지법시행령이 바뀌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과 관련된 부담과 규제가 크게 완화됨으로써 공장설립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계장을 새로 신축할 경우 농지조성비 면제,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신축이 수월해 졌지만 소방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 새로운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특히 계사표준설계도가 자주 바뀌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반문제가 수정, 또는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